

불법체류자들 감쪽같은 신분 세탁 위조 외국인등록증으로 불법 취업

‘결혼 이민’ 위조 대량 유통
90여명에 판매하고 돈 챙겨
베트남 출신 판매책 등 2명
광주출입국사무소 적발 송치
수법 진화 속 외국인 관리 허점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가 적발한 위조 외국인 등록증. 일반인은 식별 불가능하다.

외국인들의 국내 불법 체류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관공’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도로 들어온 뒤 공항에 비해 입국 시스템이 허술한 목포·완도 등 항만을 통해 몰고 들어와 불법 체류하는 루트 외에 최근에는 코로나로 재입국이 어려운 점을 감안, 아예 출입국사무소 신고 의무가 없는 ‘결혼 이민’ 목적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보란 듯 머무르면서 취업하는 불법 체류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는데 허점이 생기는 만큼 범죄·사고 발생 시 대처도 어려워질 수 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29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출입국사무소는 최근 국내 불법 체류중인 베트남인들을 대상으로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판매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베트남 출신 A(여·28)씨와 B(37)씨를 입건, 광주지검에 넘겼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대량으로 거래하다 적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외국인

등록을 한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은 대한민국에서 신분증으로서 사용할 수 있으며 취업 활동에도 사용된다.

A씨 등은 지난 8월부터 한 달 동안 90여명의 외국인 불법체류자에게 1장 당 28만원을 받고 외국인 등록증을 허위로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 SNS로 한국에서 머무를 수 있는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판매한다며 국내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모집한 뒤 국내 공범을 통해 돈을 받고 외국에서 만든 신분증을 국제 택배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출입국사무소측 설명이다.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일반인은 전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된데다, 취업 과정에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결혼이민’(F-6) 비자를 받은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면서 출입국 당국의 감시를 피했다.

이러다보니 불법 체류 외국인들도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구입해 버젓이 합법 체류자인양 행세하며 취업 활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인지 불법 체류 외국인도 증가세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6년 20만 8971명이던 불법 체류자는 2017년 25만 1041명→2018년 35만 5126명→2019년 39만 281명→2020년 39만219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취업 등을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코로나로 출국할 경우 재입국이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기한을 넘겨도 외국이 등록증 등을 위조해 국내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점도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체류 사실을 모르고 채용했다가 곤혹을 치르는 국내 사업주들도 생겨나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 체류자를 채용하다 적발될 경우 외국인 인력 채용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인력난이 지속되는 상황이다보니 외국인들이 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조 외국인등록증 구입을 시도하려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자 증가 및 범역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 등을 들어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법적금 납부와 입국 금지 면제 등의 조치를 해주고 있지만 불법체류자 감소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진훈 노무사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무작정 단속을 강화하기보다는 자진 출국을 유도하거나 농어촌이나 산업현장 등 이주노동자가 주로 일하는 분야에서 (미등록 외국인이 아닌) 합법 체류자를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외국인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학대 4세 입양아 언제 새 부모 만날까

검찰, 3세 아이 숨지게 한 양부모 친권 박탈 요청 관심

태어난 지 1년도 안돼 입양됐다 학대한 양 부모에게서 격리돼 보호시설에서 머무르고 있는 입양아는 언제쯤 새로운 부모를 만날 수 있을까.

검찰이 만 3세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하고 당시 4세 입양아를 학대한 양부모(義父母) 사건(광주일보 11월 4일 6면)과 관련, 양부모에 대해 남아있는 만 4세 입양아에 대한 친권을 박탈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부모의 친권이 박탈돼 새로운 가정으로의 입양이 가능해진다.

29일 법조계와 광주시 북구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입양아 2명을 학대해 이들 중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A씨(여·38)와 남편 B씨(34)에 대한 친권 상실 청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북구는 양부모가 구속된 이후 지난 17일 광주가정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아

입양아를 1년간 위탁할 장기보호시설을 찾고 있는 상태다. 북구측은 향후 1년 간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위탁을 하게된다. 하지만 가해자인 양부모들의 친권이 살아있어 새로운 입양 가정을 찾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게 보호기관과 자치단체측 설명이다.

해당 아이는 지난 2015년 태어나 입양된 뒤 양부모에게 정서적 학대 등을 받았지만 경찰 수사가 끝나고 1심 재판으로 양부모가 구속될 때까지 2년 가까이 가해자인 양모와 함께 생활해야 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에 따라 학대 사실이 드러난 당시 만 4세 입양아를 즉각 분리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지만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형식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양그룹 계열사 대양판지, 폐수 무단방류 사실로

영산강환경청, 현장점검 확인

대양그룹 계열사인 대양판지가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는 노동계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

폐수 처리 실태에 대한 전수 점검과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수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부실한 환경시설 점검에 대한 비판과 대안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대양판지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벌인 결과, 관련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대양판지 노조를 비롯한 노동계는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측의 폐수 무단 방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영산강청은 노동계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회사측의 3차례에 걸친 폐수 무단 배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019년 5월 폐수를 종이 제작 과정에서 나온 파지더미에 뿌린 뒤 파지 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형태로 3 t의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게 영산강청 설명이다. 원래 폐수처리장으로 보내 처리해야 할 폐수를 폐지물지에 적서 버리는 방식으로 처리하면서 별도 처리비용도 들어가지 않았을 것으로 영산강청은 추정하고 있다.

영산강청은 또 대양판지측의 미신고 대기배출 시설 설치·조업,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조업 혐의도 확인,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노동계에서는 폐수 무단 배출이 언제부터, 어떻게 이뤄졌는지와 회사측이 관여한 정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위반 사실조사 파악하지 못했던 영산강청에 맡겨두지 말고 경찰 등 수사기관이 폐수 무단 배출 의혹의 진상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장성군도 노동계 의혹 제기 이후 대양판지 점검을 거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일지 조작 등 위반사항 4건을 적발해 과태료 460만원을 부과기로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부부싸움하다 아내 살해

고흥경찰, 60대 긴급체포

고흥경찰은 29일 부부싸움을 하다가 흥기로 아내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64)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 50분께 고흥군 금산

면 자신의 집에서 음주 문제로 아내 B(63)씨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흥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미쓰비시 사죄·배상 촉구

29일 오전 11시께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양극덕 할머니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미쓰비시중공업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